

동서고속철 착공 희망이 보인다

최경환 “경제성 보완 추진 검토… 해법 찾고 있어”

국토부 장관도 “노력하고 있다” 예타조사 면제 방안은 “불가능” 정부·靑 모두 의지 재차 강조

속보=정부와 청와대가 도의 30년 숙원사업인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본보 29일자 1면 보도) 사업 추진 의사를 강하게 밝혀 도민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동서고속화철도 조기 착공에 대해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해법을 찾고 있다. 경제성을 보완해서라도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질의에서 현 정부가 18대 대선 당시 16개 광역지자체에 내건 제1공약 중 유일하게 동서고속화철도 사업만 추진이 되지 않고 있다는 새누리당 한기호(철원-화천-양구-인제) 국회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한 것이다.

그는 “(사업 추진을 위해) 여러 방안을 정부로서도 매우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달라”며 강한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현재 진행 중인 동서고속화철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예타 조사가) 진행 중인 사업을 갑자기 면제한 적은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유일환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날 “동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돼 있고,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사업이 필요하다. 비용·편익을 올리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기호 의원은 최 부총리와 유 장관의 발언 직후 “정부가 동서고속화철도 사업 필요성과 강한 추진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최근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도 ‘당연히 해야 한다. 함께 열심히 해보자’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며 “정부와 청와대 모두 사업 추진을 약속한 만큼 조만간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홍현표기자hphong@kwnews.co.kr

기재부 “동서고속철 경제성 보완하겠다”

국회 예결특별위 전체회의

기획재정부가 춘천-속초 동서고속철 추진 여부의 관건인 '경제성'에 대한 보완의지를 밝혀 주목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8일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국회 예결위원인 한기호(새누리당-철원-화천-양구-인제)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최 장관은 이날 “저도 (동서고속철도 추진의)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우 공감하고 있고, 여러 차

최경환 경제부총리 “사업 필요성 공감 예타면제 고려 안해”

례 예타 조사를 했지만 현재까지 계획으로는 경제성이 조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도 “경제성을 보완해서라도 이 부분은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이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 않느냐”는 한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그런 사례

가 과거에 전혀 없지는 않았지만 이 케이스(동서고속화 철도 사례)는 지금 한창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중인 사업으로, 갑자기 예타를 면제하는 그런 케이스는 지금까지 없었다”며 면제 불가 방침을 밝혔다.

그러면서 “그래서 여러가지 방안을 정부로서도 매우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최 장관은 아울러 한 의원이 “(정부는)항상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만 얘기한다”면서 정부의 태도를 꼬집자 “그런 차원이 아니다”라며 “이 부분은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해법을 찾아보는 쪽으

로 그렇게 고민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 장관의 답변에 앞서 “국토부도 이제 동서 고속철도망 계획에 있고 국토균형발전 등을 위해 추진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며 “(그러나) B/C가 좀 낮게 나오는 바가 있어 B/C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정부는 동서고속화철도에 대해 30년 동안 뭉서비스만 하고 있다”며 “이제 (동서고속철을) 안해주면 민심이 어디로 가겠는가. 반정부 되는 것”이라고 주장, 사업의 정상 추진을 재차 촉구했다. ▶ 관련기사 3면

서울/진민수 jimminsu@kado.net

부실공사방지위 가능

오늘 위원 위촉식 개최

강원도는 30일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부실공사방지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갖고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부실공사방지위원회는 춘천 지검장을 지낸 한무근 변호사를 비롯해 교수와 토목·건축·안전 분야 전문가,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대한빙상경기연맹·강원도의회 추천 인사 등 11명에 당연직으로 도 행정부지사가 참여한다.

부실공사방지위원회는 앞으로 경기장 등 올림픽 시설의 부실공사 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앞서 도는 지난 4월 건축을 비롯해 토목 등 18개 분야의 전문가 36명과 공무원 7명 등 총 43명으로 구성된 부실공사방지실무위원회를 통해 현재까지 57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을 마련하거나 개선했다.

백오인 105in@kado.net

종합심사낙찰제 임박 ‘기대반 우려반’

내년부터 관급공사 도입

도내건설업체 불리 우려

건설업계의 최대 관심사인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합제)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강원도내 건설업계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되고 있다.

29일 도와 도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종합제 시범사업이 막바지에 다다르고 제도 도입을 위한 법령 개정이 본격화되면서 관련 제도 시행 시기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이미 ‘국가계약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

년부터 관급공사에는 최저낙찰제를 폐지, 종합제로 개편하기로 했다. 또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공기업도 시범사업을 확대, 본격적인 종합제 모드로 전환했다.

1300억원 규모의 ‘강릉 지방기지 건설공사’ 등 대형 건설공사도 종합제로 발주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종합제는 입찰금액 외에도 공사수행 능력·가격·사회적 책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제도로 최저낙찰제의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지만 종합제는 건설업계의 양극화만 부추길 것이란 부정적인 시각이 지

다.

인은북

내년부터 지자체 300억 이상 공사 '종합평가제' 시행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300억원 이상 공사에 시공능력, 기술능력, 시공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종합평가낙찰제'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부당한 단기 삭감이나 결제 지연 등을 초래한 부정당업자 제재는 강화된다. 행정자치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에 고한다며 29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1월9일까지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300억원 이상 대형공사에 '종합평가낙찰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담겼다.

**지방계약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덤핑낙찰 유발 '최저가'는 폐지**

**상생협력법 위반 종합건설사
부정당업자 입찰제한도 강화**

앞서 행자부는 지난 7월30일 공청회를 열어 3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 예정가격 대비 77% 이상의 낙찰률을 보장하고 현장대리인과 신기술 개발·활용 실적 등에

대한 평가대상을 대표사로 한정해 지역업체의 입찰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새로운 낙찰자 결정기준을 발표하 바 있다.

적정공사비 보장으로 시공의 안전성과 시설물의 품질을 높이는 방안이다.

300억원 이상 공사에 적용해오던 최저가낙찰제는 과도한 가격경쟁을 유발해 덩핑낙찰과 공사품질 저하 등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폐지하기로 했다.

특히 '하도급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을 위반한 종합건설사에 대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강화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조치라는 게 행자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지자체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을 현행 재무관(사도-자치행정국장, 사-군·구-부시장(국장)·부군수·관련국장)에서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개편해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자치단체와 맺은 계약을 이행한 기업에 대금을 지급하는 기간을 '청구 후 7일 이내'에서 '청구 후 5일 이내'로 조정하고, 지자체가 2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소액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추진할 때에는 소기업·소상공인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정중순 지방재정서제실장은 "지방계약제도 개선으로 지방계약의 투명성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종합평가낙찰제의 본격 시행에 앞서 추진하려던 시범사업은 불투명한 실정이다.

행자부는 애초 5건 내외의 공사를 시범사업으로 진행한다고 밝혔지만, 지자체에 300억원 이상 공사가 찾기 어려워지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게다가 종합평가낙찰제 세부 시행 방안이 담긴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마련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한형용기자 je8day@

건설공제조합 이사장에 박승준氏

〈골든키자산운용 부회장〉

“모든 역량 동원해 최고 보증기관 만들 것”



건설공제조합은 29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제107회 대의원 임시총회를 열고 신임 이사장에 박승준 골든키자산운용 부회장(사진)을 선임했다.

1958년 서울 출신인 박 이사장은 유한공고와 건국대 법학과를 나와 단국대 대학원 건축학 및 건축공학 석사과정을 수료했으며 이후 사조산업 개발·기획본부장, 포레스트개발 설립 겸 대표, 웅포관광개발 베어리어골프리조트 대표 등을 지냈다.

박 이사장은 “모든 역량을

동원해 조합을 최고 보증기관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열린 자세로 조합의 주인인 조합원과 가까운 동반자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박 이사장의 임기는 오는 11월1일부터 3년이다.

조합은 또한 임기 만료 및 자진 사퇴한 운영위원 3명의 후임자를 선임하기 위해 7명의 전행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했다. 조합은 아울러 △개인 연대보증 폐지 △신용정보 수집·이용 및 교환에 관한 기본 방침 결정 △융자금 이자율 인하 △운영위원 증원 관련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상황을 총회에 보고했다.

데스크칼럼

원정호
금융부 차장



건설공제조합 새 이사장에 거는 기대

앞으로 3년간 건설산업 '금융 젖줄'을 이끌 이사장이 선임됐다. 건설공제조합은 29일 대의원 총회를 열고 박승준 이사장 선임의 건을 가결했다. 박 신임 이사장은 오는 11월1일부터 자본금 5조2000억원, 보증잔액 105조원의 대형 전문금융기관의 사령탑을 맡는다.

새 이사장을 선임하기까지 적잖은 진통과 우여곡절을 겪었다. 조합 노조는 선정 절차의 투명성과 이사장 후보의 전문성을 문제삼아 반대 시위와 천막 농성을 벌였다. 지난 13일 이사장 추천을 의결한 운영위원들과 충돌 직전까지 갔고, 대의원 총회에서는 신임 이사장에게 사퇴하라며 그를 에워싸기도 했다.

그동안 조합 이사장은 국토교통부 고위 공무원이 맡아왔다. 정완대 현 이사장도 국토부 중앙토지수용위원 출신이다. 그의 임기는 지난해 11월4일 끝났지만 후임자 인선이 늦어지면서 1년 가까이 임기를 이어왔다. 지난 6월 관행대로 국토부 전 고위공무원이 내정되는가 싶더니 총회가 지연되는 사이 '제3의 인물'인 박 이사장이 추천됐다.

박 신임 이사장에 대해 업계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그가 건설산업계의 대형 금융기관에 헤성처럼 등장하다 보니 배경에 대한 뒷말이 많고 당분간 이 같은 꼬리표가 따라다닐 수 있다. 이는 대외 운신의 폭을 좁히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박 신임 이사장은 중소 자산운용사의 부회장을 지냈고, 포레스트개발이라는 시행사를 창업한 경험이 있다. 이를 들어 건설과 금융산업에 문외한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러나 자본금 5조원의 대형 건설전문 금융회사를 맡을 정도로 식견과 경륜을 충분히 갖췄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새 이사장의 경영철학이나 운영 스타일이 대외에 잘 드러나 있지 않은 점도 조합 안팎에서 우려

하는 대목이다. 물론 조합은 지난 63년 설립 이래 52년을 임직원과 조합원의 견제와 협력에 의해 시스템적으로 움직여왔다. 그렇지만 이사장이 경영의 키를 쥐고 있는 만큼 어느 방향으로 온전하느냐에 따라 조합 발전 속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가 민간 출신 이사장이라는 점은 기대감과 희망을 낳는다. 통상 관료 출신이 이사장을 맡으면 조합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가는 장점이 있다. 큰 모험을 택하지 않는 대신 특별한 사고를 내지도 않는다. 이는 갈수록 복잡해지고 급변하는 금융시장 환경 아래에서는 적합하지 않다.

박 신임 이사장은 민간에서 기업을 창업했고, 리조트와 골프장을 운영했으며 자산운용사에 몸담기도 했다. 이는 관료에 비해 조합원들의 어려움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 것임을 보증한다. 박 신임 이사장 스스로도 총회 선임 직후 "열린 자세를 갖고 조합의 주인인 조합원들로부터 지지와 성원을 받는 동반자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최고의 보증기관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신임 이사장 앞에는 현안이 산적해 있다. 보증과 융자·공제 등 단순 금융에서 탈피해 복잡한 건설경영 환경에 맞춰 새로운 고객 중심의 맞춤형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해야 한다.

또 대형사와 중소 건설사 중심에서 이제는 중견 건설사까지 보듬어 전체를 아우르는 금융 수요가 무엇인지 헤아려야 한다. 건설업의 해외 진출이 잦아진 만큼 글로벌 건설금융기관으로 나아가길 비전 제시와 실천도 뒤따라야 한다.

건설업계는 그를 총회 등 절차를 거쳐 신임 이사장에 선임한 만큼 더 이상 이전의 과오를 묻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지휘봉을 쉽게 내준 것으로 생각하면 오산이다. 박 신임 이사장이 침체에 빠진 건설산업에 새로운 에너지와 활력소가 돼 보답해야 할 것이다.